

아침세평

김홍석

G-Kunst연구소장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파도 앞에 전남과 광주가 '통합특별시'라는 하나의 배에 올라타려 한다. 행정구역의 통합은 단순한 지도를 새로 그리는 행정적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시·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문화적 혈맥'을 잇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강력한 남도 문화권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제 우리는 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넘어, 문화예술 교육과 생태계 재편, 그리고 '남도 다움'의 세계화라는 본질적인 과제를 직시해야 한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문화예술 생태계는 '가까우면서도 먼' 이분법적 구조다.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풍부한 인프라와 예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배후 시장이자 콘텐츠의 원천인 전남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반면 전남은 천혜의 자연과 깊은 역사적 서사를 품고 있으나, 이를 예술로 승화시키고 향유할 전문 인력과 거점 공간의 부족이라는 고질적 결핍을 겪고 있다. 필자는 최근 광역 문화재단 두 곳에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인터뷰와 서류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도·농·산·어촌이 처한 문화적 환경이 너무나 크다는 현실을 직접 확인했다. 전남·광주도 다른 광역도시가 처한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25년 예산 기준으로는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약 3400억원, 전남도는 약 6280억원을 편성했다. 양 시·도를 합치면 약 1조원에 육박하는 거대 예산이 집행된다. 게다가 통합에 따른 연간 5조원, 5년 20조원의 예산이

전남광주특별시, 호남권 문화예술 공동체 기회

편성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행정 경계에 가로막혀 중복 투자와 인프라 편중이라는 비효율을 낳고 있다. 각자도생의 방식으로는 2조원이 넘는 수도권 의 압도적인 문화 예산과 인프라 풀림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다. 인구 감소로 인한 '문화 사막화'는 이미 농·산·어촌을 넘어 중소도시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의 매력 상실과 추가적인 인구 유출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광주와 전남 주요 도시들의 강점을 결합한 '메가 컬처 벨트' 구축이 가능해진다. 크게 현재의 벨트를 굳이 나누어 보면 광주는 콘텐츠 생산 기지로서, 순천·광양(생태, 산업)은 정원과 기술이 결합한 야외 예술의 장으로, 목포·여수(해양, 소리)는 근대 역사 자산과 섬을 무대로 한 글로벌 해양 문화 거점이라는 생태계 기능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도시 예술가들은 농·산·어촌의 폐교나 유휴공간을 '메지던스'로 삼아 창작에 전념하고, 지역 주민들은 이틀로부터 수준 높은 예술 교육을 받는 '문화적 순환 체계'가 형성된다. 프랑스가 2016년 레지옹 개편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중앙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고, 도시 예술가들을 소멸 위기 농촌으로 유입시킨 사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한다.

예술가들이 지역에 정착하게 하려면 일회성 지원을 넘어 '예술 진화적 정주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인구 감소로 비어가는 원도심의 빈집과 폐공장을 리모델링해 예술가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창작·주거 복합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전남·광주 통합 예술인 복지 카드' 도입과 창작 지원금 현실화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예술가가 일정한 기간 지역에 머물며 주민과 호흡하는 '아티스트 스테이(Artist Stay)'를 확대해 지역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문화 생태계와 그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통합의 편익이 모든 시·도민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문화 소외 지역에 대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섬마을이나 산간 오지까지 버스를 개조한 갤러리와 공연장이 찾아가는 '이동형 모바일 아트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인구수가 아닌 실제 시설 접근성을 따지는 '문화 소외 지수'를 개발하여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 특히 노년층을 위한 '예술 복지' 예산을 확충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통합특별시가 지향해야 할 핵심 방향은 남도 고유문화의 현대적 재해석이다. 판소리, 남농화, 가사문학 등 대한민국의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남도의 자산에 광주의 미디어아트 기술을 결합한 남도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전남의 갯벌과 섬을 무대로 한 대규모 야외 현대미술제나 남도 소리 페스티벌을 브랜드화해 세계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 이는 '가장 한국적인 원형의 힘'으로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전남·광주 통합은 단순히 행정 조직을 합치는 효율성의 논리가 아니다. 그것은 남도의 깊은 뿌리와 광주의 현대적 감각을 결합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적 자신감을 세우는 일이다. 특정 지역으로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형 문화기금'을 조성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도시의 활력과 농촌의 정취가 예술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청년들이 돌아오고 지역은 자생력을 갖게 된다. 전남광주특별시가 그리는 미래는 '문화로 풍요로운 상상 공동체'여야 한다. 이제 행정적 논의를 넘어, 시·도민의 마음을 잇고 남도의 맛을 세계로 퍼올 문화적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할 때다.

기고

정계순

광주 서구의회 사무국장



경계를 넘어 전남·광주 공동의 미래를 그리다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인공지능과 에너지 산업, 미래 모빌리티와 관광 자원의 연계 등은 더 이상 한 지역의 과제라 아니라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다. 행정통합은 이러한 협력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통합의 진정한 의미는 거창한 정책이나 경제 지표에만 있지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삶의 변화다. 행정구역의 경계 때문에 발생했던 서비스 격차와 불편을 줄이고 복지·교통·의료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보다 일관된 정책이 추진될 때 주민들은 통합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통합이 성공했다는 평가는 결국 주민의 일상 속에서 내려질 것이다.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며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다. "통합이 우리 삶을 정말 더 나아지게 하느냐"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행정통합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다. 통합은 행정의 규모를 키우는 일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지역 간 균형발전 에 대한 우려, 행정 조직의 조정 과정, 공공 인프라 배치 문제 등은 충분한 논의와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통합이 또 다른 갈등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어느 한쪽의 희생이 아니라 함께 성장한다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 경쟁이 아니라 완성도를 높이는 일이라고 본다. 충분한 소통과 공감, 단계적인 정책 설계를 통해 지역 구성원 모두가 통합의 주체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행정은 통합을 선언할 수 있지만 통합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시민과 도민의 참여와 신뢰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과 우려를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담길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은 하나의 결과라 아니라 긴 여정의 시작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통합의 성과를 서둘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가능성을 어떻게 함께 키워 갈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다.

이런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 구조 개편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더욱 단단히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 생활방식을 존중하며 새로운 광역 공동체로 나아가는 통합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이다.

미래 세대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인 만큼 지역 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향한 의미 있는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설

'고유가 지원금' 중동위기 극복 계기되길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등으로 서민층이 겪는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르면 이달 말이나 5월 초부터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6조 2000억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예산안중 소득하위 70% 이하 등 3577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을 차등 지급하는, 4조8000억원에 달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눈에 띈다.

즉, 기초생활 수급자(285만명)는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36만명)은 45만~50만원, 나머지 소득하위 70% 이하(3256만명)는 10만~25만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소득 하위 70%이하 대상에 중산층이 포함돼 있는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인 가구 월소득 385만원, 2인 가구 630만원, 3인 가구는 804만원, 4인 가구는 974만원까지다.

이 지원금은 지난해 지급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처도 지역화폐와 동일하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중동전쟁에 따라 살림살이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의 성격이 짙다. 다양한 형태의 현금성 지원을 통해 살림 안정을 돕고, 어렵게 되살린 내수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처방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게 이번 추경 재원을 전액 초과세수로 충당한다는 점이다. 반도세 호황으로 법인세수가 14조8000억원 늘었고, 증시 활황에 증권거래세수와 농어촌특별세수가 10조3000억원 더 걷히는 등 초과세수 약 25조원에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더해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의 에너지 소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K-패스 혜택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면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쇼크'가 발생해 서민 가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아무쪼록 이번 피해지원금이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정체성 담은 '특별시 지정유산' 성공 기대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지역을 상징하고 대표할 만한 핵심 유산을 '특별시 지정 유산'으로 직권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기존 지정문화유산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걸맞게 역사·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40여년 만의 행정통합이라는 상징성을 문화유산과 연결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겠다는 얘기다.

보통 지정 문화유산제는 여러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을 '지정'에 관리·보호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광역시·도는 국가지정이 아닌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를 인정해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이번 특별시 지정유산에는 그동안 국가유산이나 시·도 지정문화재에 포함되지 못한 유산을 발굴해 관리 체계로 편입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

여기에 향후 국가유산 지정이나 국제적 가치 확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유산들도 대거 포함됐다. 대상을 살펴보면 선사·고대 분야에서 화순 대곡리 유적과 함평 초포리 유적 및 출토 유물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또 중세·근대 분야에서는 장성 하서 김인후 종가문서, 장흥 보림사 대적광전 복석탑 남계석 탑지, 순천 예교진병일록 '삼초집' 등이 포함됐다. 이들 유물들은 현재 국립광주박물관 등에 소장돼 있는데 그동안 지역 역사성과 연계한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근현대 유산으로는 광주와 나주 일대에 걸친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유적이 대표 사례로 꼽히며 자연유산 분야는 무등산을 주요 지정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달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지정 대상 선정과 현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6월 위원회 검토를 거쳐 7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지정 심의와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유산으로의 단계적 격상까지 염두에 둔 이번 특별시 지정유산제도도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취재수첩

'머릿수'에 저당 잡힌 결혼식

송대웅

산업부 차장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26년 2월 결혼서비스 가격 동향'을 보면 광주지역의 결혼 비용이 한 달 사이 9% 넘게 치솟았다.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고 치부하기에는 상승 폭이 예사롭지 않다. 이는 수치 변화를 넘어 결혼 시장의 비용 구조 자체가 특정 조건에 따라 기형적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신호다.

결혼서비스 가격 폭등의 주범은 이른바 '최소 보증인

원'이다. 예식장들이 하객 수를 기준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계산법을 고수하면서, 과거 100명 안팎이던 기준선이 어느덧 200명대로 훌쩍 뛰었다. 예식장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를 '하객 기준 상황'이라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연쇄적인 비용 상승을 불러온다. 이번 조사에서 대관료가 무려 150%나 급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단순히 대여료가 올랐다고 치부하기는 예사롭지 않다. 이는 결혼식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전체 비용이 밀려올라간 결과로 풀이된다. 가격이 오를 게 아니라 결혼을 위한 '임장권'의 기준 자체가 높아진 것이다.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소비자 선택권의 실종이다. 신랑·신부는 소규모 예식을 원하더라도 최소 보증인원을

채우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억지로 하객을 초대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이 개인의 가치관보다 시장이 요구하는 '숫자'를 맞추는 과정으로 변질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경쟁이 작동하는 영역에서는 시장 논리에 따라 가격이 안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의 결혼 비용 폭등이 불가피한 흐름이 아니라, 예식장이라는 특정 공간의 독점적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이제는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결혼 비용이 '왜' 오르는지를 묻기보다, 왜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유지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시장 자율에 맡기기에는 정보 비대칭이 너무 크고 계약 구조 또한 불투명하다.

결혼은 한순간이지만 그 부담은 청년들에게 긴 부담을 남긴다. 저출생과 결혼 기피를 우려하기 전, 숫자로 청년을 압박하는 결혼 시장의 잘못된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www.GwangNam.co.kr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Gwangnam Ilbo, including phone numbers and email addresse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circulation and advertising.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